

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與野 담판협상에 달렸다

여야, 9일까지 예산안 처리 목표
지도부 간 담판 협상 가능성
정기국회 회기 넘긴 사례 없어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협의해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매년 12월 2일)을 넘겨서도 여야 간 쟁점 현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 간 정치 담판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논의했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차원에서 진행한 예산안 심사가 여야 갈등으로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다툰 것은 윤석열·이재명표 예산안 문제였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안은 감액하고, 이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뉴스1

명 당 대표가 추진해온 사업 예산안을 증액하려 한 게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심사 방식에 반발했고, 관련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번번이 충돌했다.

여야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한 사업 예산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소형 스마트원전(ISMR),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안 등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부수법안(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역시 민주당 반발로 처리

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은 9억원(기존 6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을 특별 공제(총 12억원)하기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소수 부자를 위한 명백한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현행 25%)로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기업 밀어주기”라며 반발했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이 협의되지 않자 주요 언론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많다. 그런 것을(민주당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민주당이 10·29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까지 요구하는 데 대해 “원래 예산을 처리하고(10·29 참사)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예산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파행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

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여야 지도부 간 담판 협상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된 사례는 없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되면서다.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은 법정 시한인 12월 내 예산안이 처리됐다. 2020년 역시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나(2015년, 2016년, 2021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올해는 여야가 쟁점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만 여야가 2+2 협의체를 통해 5일까지 예산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원내대표 차원의 협상으로 넘겨 풀어갈 것이라고 합의한 만큼 ‘정치 담판’에 따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민생 주력’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발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00일
지역별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고 대
여당 중심으로 비판 커지는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00일을 맞는다. 77.77%의 최종 득표율로 당 대표에 취임한 이 대표는 지난 100일간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동시에 검찰이 이 대표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하면서 ‘사법 리스크’도 현실화했다.

이 대표 취임 후 행보를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민생’, ‘사법 리스크’다. 취임한 직후 이 대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설치였다. 이 대표는 ‘유능한 대안 야당’이란 기치 아래 지역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 문제에 대응해왔다. 지난 100일간 이 대표가 찾은 지역은 광주·전북·부산·전남·경기·대구 등이다.

이 대표는 특정 현안과 관련한 국민을 지도부 회의로 초청해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올해 정기국회에 앞서 민주당이 마련한 ▲서민 생활 안정 ▲미래 세대 지원 ▲갑질 근절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국민 피해 지원 ▲디지털·신산업 지원 및 피해 방지 등 5대 분야 22대 민생 법안도 이 대표 주도로 준비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에 맞춰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정기국회 7대 과제도 선정해 추진해왔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이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임된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리랜드, 앤디 김)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고 요청 서한 발송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네 분의 하원 의원에게 보낸 당선 축하 서한에) 그간 한미 관계의 외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IRA 법안 취지인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에 공감한 내용을 언급한 이 대표는 서한에 “다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은 사실도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건강한 경제 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질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생 행보는 발목을 잡힌 형세다. 이 대표가 민생 행보에 주력할수록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여러 가지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상황에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지만, 여당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도 잇달아 구속됐다.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자 당내 비명(非 이재명)계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 압박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 취임 초기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뭉쳤지만,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압박이 커지자 ‘검찰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밝힌 이 대표는 같은 달 25일 “언제든지 털어보라”, “선무당이 동네 굿을 하듯 한다” 등 검찰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최영훈 기자

서훈 구속에 文 “최고 北 전문가 꺾어버려”

(前 대통령)

“신뢰의 자산 다시 찾기 어렵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서 실장 같은)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훈처럼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 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며 서 실장의 구속을 안타까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전날(3일) 구속됐다.

서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 외 배제되는 첩보들을 삭제하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물의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허위공무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비판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서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무엇인가.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 자료를 조작 은폐해 월북물이로 규정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